폴리텍대, 산업 변화 맞춰 4년간 학과 47개 신설·77개 개편

대전캠퍼스 클라우드보안과 첫 졸업생 배출… 취업률 100%

울산캠퍼스 AI산업안전시스템과 첫 졸업생 취업률 90.4% 성과

반도체시스템과, 올해 첫 신입생 출범 동시에 기업 채용협약반 운영



폴리텍대 울산캠퍼스 AI산업안전시스템과 학생들이 위험 현장에 선진입하는 4족 보행 안전로봇의 구동 원리를 학습하고 있다. /한국폴리텍대

한국폴리텍대가 2020년대 들어 125개 학과를 신설 또는 개편했다. 노동시장 변화 및 기술 전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다. 올해 첫 신입생을 받은 학과의 경우, 입학한 지 1년도 지나지 않는 학생이 기업 채용을 확정 짓는 사례를 만들어 냈다. 또 신생학과 1회 졸업생 전원이 취업·진학에 성공한 사례도 나왔다. 이처첨 산업 수요를 겨냥한 학과 설계가 현장에서 결실을 맺고 있다.

폴리텍대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역 산업 수요, 기업 의견 등을 종합해 매년 학과를 새로 만들고 변화해 왔다. 최근 4년간 신설 48개·개편 77개 등 125개 학과가 산업 변화에 맞춰 새 옷을 입었다. 반도체·산업안전과 같은 수요에 대응해 신규 학과를 만들고 기존 학과도 지역산업 구조에 맞게 꾸준히 손질해 온 것이다.

2024학년도에 신설된 대전캠퍼스 클라우드보안과는 올해 2월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졸업생 전원이 취업·진학에 성공하며 취업률 100%를 기록했다. 해당 과 졸업생들은 한국아이티진흥, 진인프라 등 클라우드 인프라·보안 전문기업을 비롯해 대학병원 전산실에 취업했다. 일부는 보안 전공 심화를 목적으로 4년제 일반대학에 편입했다. 지능형 사이버 위협이 늘면서 데이터센터 보안을 책임질 실무형 인력이 부족하다는 산업계 요구와, 국방·공공 연구기관 및 IT 인프라가 밀집한 대전·충청권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다.

같은 해 출범한 울산캠퍼스 AI산업안전시스템과도 첫 졸업생 배출과 함께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올해 첫 졸업생 취업률은 90.4%에 달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안전 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폴리텍대 학위과정 가운데 처음으로 개설된 산업안전 학과다. 산업단지가 밀집한 울산의 특성을 반영했다. AI 기반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산업안전 전공은 울산을 첫 시작으로 2025년 창원캠퍼스에 이어 2027년 서울정수캠퍼스까지 확대됐다.

또 2026학년도에 첫 신입생을 받은 성남캠퍼스 반도체시스템과는 출범과 동시에 반도체 패키징 전문기업 앰코테크놀로지와 채용협약반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이 교육과정 설계에 직접 참여하고 학생은 재학 중 채용 면접 등을 거쳐 1학년 2학기에 채용을 확정한다. 그 결과 올해 9월 군필자 5명은 취업을 확정하고 군 미필자 17명은 인재풀에 등재되어, 복학 후 면접을 통해 최종 채용이 확정된다.

포항캠퍼스 전기과는 철강·이차전지 등 지역 산업의 늘어난 전기설비 인력 수요에 맞춰 올해 문을 열었다. 만 40세 이상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장년특화과정에는 모집정원 40명에 119명이 몰린 바 있다. 올해 전기기능사 시험에서도 필기 22명 전원, 실기 19명 중 18명이 합격(94.7%)해 신설 첫해부터 교육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 이사장은 "학과 신설과 개편은 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가장 먼저 길러내겠다는 약속"이라며 "기업과 함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지역 산업과 호흡하는 학과 운영을 통해, 청년과 중장년 모두에게 기술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에너지바우처'로 취약계층 겨울나기 지원

기후부, 에너지 복지 강화 방안 시행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 신설

등유·LPG 가구에 추가 바우처 지원

정부가 올겨울 한파를 앞두고 쪽방촌, 고시원 등 주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고, 등유·LPG 사용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범부처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복지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지원 가구 수를 전년보다 4만 가구 늘린 144만 가구로 확대하고, 예산도 5042억 원으로 증액했다.

우선 이사나 세대원 수 변경 등으로 바우처 지원이 중단됐으나 고령이나 장애 등으로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가 신설된다. 상담원이 대상자에게 직접 연락해 담당 공무원이 재신청을 처리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내년 3월까지의 2만 50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 형태 특성상 직접 바우처를 쓰기 힘든 계층을 위한 '사전 현금지급 제도'도 처음 시행된다. 쪽방촌이나 고시원 등 월세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래 전 미리 현금을 지급하며, 11월부터 신청 가구 5300여 곳을 우선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집배원과 사회복지사가 미사용 가구를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의 대상도 대폭 넓힌다. 지난해 전액 미사용 가구(5.9만 가구) 중심에서 올해는 50% 미만 사용 가구까지 범위를 확대해 최대 12만 2천 가구를 방문, 카드 발급과 사용법 안내 등을 밀착 지원한다.

중동전쟁과 고환율 여파로 가격이 급등한 등유·액화석유가스(LPG) 사용 가구(약 21만 가구)에는 14만 7000원 상당의 추가 바우처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해당 가구의 평균 지원금은 36만 7000원에서 51만 4000원으로 늘어나며, 12월 9일부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통합 지급돼 이용 편의성이 높아진다.

이 밖에도 요금 체납으로 인한 난방·전기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 내년 5월까지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조치가 시행되며, 전기 사용 제한 역시 내년 2월까지 해제된다. 전년도 체납액도 바우처 잔액 범위 내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상승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삶에 더욱 무겁고 가혹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단 한 분의 소외됨 없이 모두가 안심하고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발굴하여 촘촘한 에너지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aT, 美·EU 통관·규제 변화 대응방안 안내

내일 농식품 수출기업 온라인 설명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이달 12일 '2026년 미국·EU 비관세장벽 대응'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 수출기업 대상이며, 미국과 유럽연합의 주요 통관제도 및 규제 변화 관련한 대응방안을 안내한다. 이 설명회는 지난 10월 열린 '아시아 비관세장벽 대응 설명회'에 이어 후속으로 마련됐다.

주요 농식품 수출시장인 미국과 EU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수출기업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국가별 농식품 시장 현황 ▲식품 수입통관 절차 ▲주요 통관제도 ▲2026년 주요 제도 변경사항 등이다.

올해는 EU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이 8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식품원료의 안전성 인정제도인 'GRAS'의 신고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주요 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미국과 EU의 최신 통관제도와 규제 동향을 점검하고, 수출기업의 선제적 대응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2026년 글로벌 식품시장 분석 및 2027년 농식품 수출 전망' 세션을 통해 글로벌 농식품 시장의 주요 이슈와 내년도 수출 전망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이 국제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수출 기회를 발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찬 aT 수출식품이사는 "미국과 EU는 식품 안전과 표시·포장 등에 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의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요 수출시장의 최신 규제 동향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우리 농식품의 안정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설명회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행사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설명회는 당일 aT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생중계된다. 관련 자료는 농식품 수출정보 누리집 '카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수자원공사-英 리버풀권역정부, 조력발전 기술협력 강화

'조력발전 콘퍼런스' 공동 개최



한국수자원공사와 영국 리버플권역정부(LCRCA)가 지난 9일 경기도 안산시 시화조력관리단에서 공동 개최한 '조력발전 콘퍼런스'에서 오봉근 한국수자원공사 재생에너지본부장(오른쪽 여섯 번째)과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로 조력발전이 주목받는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가 영국 리버풀권역정부와 손잡고 글로벌 기술 협력 강화에 나섰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지난9일 경기도 안산시 시화조력관리단 조력문화관 대강당에서 영국 리버풀권역정부(LCRCA)와 공동으로 '조력발전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양국 간 조력발전 기술을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정부와 지자체, 학계, 기업 및 영국 리버풀권역정부 관계자 등 국내외 조력발전 및 재생에너지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조력에너지는 기상 여건의 영향이 적고 발전량 예측이 가능한 청정에너지로 꼽힌다. 특히 수자원공사가 운영 중인 시화조력발전소는 지난 2011년 254MW급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된 이후, 원활한 해수 유통을 통해 수질 개선과 갯벌 복원, 탄소 저감 효과를 동시에 거두며 친환경 재생에너지 확산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수자원공사의 '자연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시화조력의 미래' 발표를 시작으로 ▲조상민 한국공학대 교수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과 조력발전의 역할 ▲메리 드루리(Mary Drury) 영국수력협회 의장의 영국 조력발전 기회·정책 및 실현 방안 ▲박진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사의 국내외 해양에너지 개발 현황 및 미래 전망 등 총 6건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조철희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한 종합 토론에서는 기술 고도화와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이 다뤄졌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어촌공사, 농업법인에 '공동영농' 교육

우수사례, 법·제도, 운영 관련 교육

한국농어촌공사가 '2027년 공동영농 확산지원사업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농업법인 관계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5~6일 이틀간 충북 충주에서 진행됐다.

공사에 따르면 농촌 고령화와 농업인력 감소에 따라 최근 '공동영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동영농은 법인을 중심으로 농지를 공동 이용·경영하는 영농 방식이다. 분산된 농지를 집적화해 기계화 영농의 규모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생산부터 유통까지 공동으로 관리함으로써 경영비 절감 및 농업소득 향상을 도모한다.

교육은 공동영농 우수사례 발표로 시작됐다. 늘봄영농조합법인 홍의식 대표가 경북 문경 영순지구의 공동영농 추진 과정과 농산물 생산실적, 참여농가 소득분배 성과를 소개했다.

공동영농 관련 법·제도와 농업법인 운영에 관한 교육도 진행됐다. 최정운 변호사는 공동영농 경영체 지정요건과 농지임대차 등 관련 법·제도를, 김태용 회계사는 농업법인의 설립·운영과 세무 실무를 다뤘다. 또 석태문 전 대구대 교수는 이모작 등을 활용한 고소득 작부체계 구성과 법인 수익 정산·배분 방안을 소개했다.

정부 정책과 사업 추진 방향,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교육도 이어졌다. 농식품부의 홍성욱 사무관은 2027년 공동영농 확산지원사업의 추진 방향과 지원 기준, 향후 공모 일정 등을 안내했다.

/세종=김연세 기자